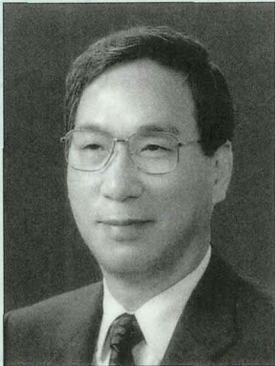


총체적 인구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23년 5068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434만명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62년부터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에 매진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과거와는 정 반대의 새로운 인구문제에 봉착하게 된 현실을 감안 할 때 이 분야에 봉직해온 연구자로서 많은 감회와 더불어 인구문제는 그 속성상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정책과제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선진국에서는 100여 년에 걸쳐 이룩된 인구전환(고 출산·사망수준에서 저 출산·사망수준에 도달)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되었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와 노동력 부족현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에서 2019년에 14.4%로 상승하고, 다시 11년 후인 2030년에는 23.1%로 급증하여 본격적인 초고령사회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고령인구 비율의 급증 현상은 세계 인구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것이며, 저출산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장제도 기반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인구의 급증은 사회복지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이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4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히 수치적인 것이 아닌 새로 태어난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더 나아가서 노동력이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현상이



趙南勳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로 치달을 것이다. 물론 노령인구의 증가는 곧 인구가 오래 사는 평균수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들 노령인구는 그 특성상 생산력이 약화되는 반면, 이들의 소득 및 의료 등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다. 그 비용은 결국 노동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젊은 인구의 감소로 노동세대의 능력을 초월하게 되어 결국 국가와 사회 전체의 비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파로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사회에서 문명의 몰락으로까지 경고해온 우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 일각에서는 가용 여성과 고령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이들 여성과 고령인구의 활용은 새로운 사회적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동시에 그 가용성 범위도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16~18일 기간 중 UN에서는 저출산 선진국과 한국, 일본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정책대응'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생과 사망수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2.1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의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불란서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경험했듯이 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사 출산율이 증가해도 그 효과는 25~30년 후에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정 출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과 더불어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퇴직정년, 가족제도, 여성 및 노인복지, 건강증진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개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기 UN회의의 주요 결과였다.

특히 퇴직정년의 단계적 연장은 향후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노동력 부족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시책으로 인하여 당장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가 안정되는 일정 시기부터는 전 직종 종사자에 대한 점증적인 퇴직연령의 상

인구규모나 인구구조는 단기간에 변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도전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향조정은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이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의식 변화에 따른 만혼 내지 독신 경향과 결혼후 소자녀화와 심지어는 무자녀화 현상에 기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구규모나 인구구조는 단기간에 변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도전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저하된 1989년 이래 각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저출산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인구대책의 시행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